

오리 도압량 7년새 7배 가까이 급증

오리 도압량이 2003년 AI파동 이후 7년만에 7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오리협회에 따르면 2004년 1500만마리를 기록했던 도압량은 2008년 4800만마리를 기록한데 이어 지난해 8500만마리로 급증했다.

국내 오리고기 생산량은 거의 국내에서 소비되는 점을 고려한다면 오리고기에 대한 소비량이 7년만에 7배가 늘어난 것이다.

업계는 이 같은 도압물량 증가는 오리고기가 건강 식품이라는 인식이 확산됨과 더불어 다양한 요리 개발이 함께 이뤄졌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국오리협회의 관계자는 “오리산업은 지난 수년간 성장을 거듭한 끝에 지금은 대형마트에서도 쉽게 오리고기를 구입할 수 있을 정도로 대중적인 육류가 됐다”며 “이같은 오리산업의 발전을 이어나가기 위해선 시설현대화 등 정부당국의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오리가격은 1월 30일 전주대비 500원 오른 신선육2kg 기준 7300원을 기록했다.

지난 1월 30일 새끼오리가격은 400원으로 포함세를 유지했지만 생오리 3kg과 신선육2kg, 토치육2kg은 전주보다 각각 500원씩 오른 5800원, 7300원, 7500원을 기록했다.

이 같은 오리고기가격 상승은 겨울철 한파로 생산성이 저하되고 원가이하의 가격대가 형성돼 전체적인 생산량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강현 한국오리협회 전무는 “지금은 비수기라 소비심장에 따른 가격 상승이 아닌 생산량 감소에 따른 가격상승”이라며 “현재 육용오리 생산원가가 6100원 가량이고 새끼오리 생산원가가 600

원이 넘어 가격이 상승했다고 해도 생산성 저하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어 소비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농수축산신문 김동호 기자 kdh0529@afnews.co.kr 2012.02.02

전남, 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 대상 확대 4월부터... 처벌규정 대폭 강화

전라남도도는 지난 2월 1일 수입 농수축산물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거나 지역 특산품이 아닌 농산물을 지역 특산품인 것처럼 속여 폭리를 취하는 부정유통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한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4월 11일부터 개정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현행 음식점에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배달용 포함), 오리고기(훈제용 포함), 쌀, 반찬용 배추김치’에 대해서만 원산지를 표시토록 했던 것을 배추김치의 경우 찌개용, 탕용으로까지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을 확대했다.

또한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민물장어), 낙지를 취급하는 모든 음식점에 대해서도 원산지표시를 해야 한다.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도 대폭 강화됐다.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규정을 위반한 경우 지금까지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했으나 지난달 26일부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명창환 전남도 식품유통과장은 “친환경식품 메카인 전남에서 부정유통 농수축산물이 발을 붙일 수

없도록 관련 업소와 음식점에 대한 교육을 통해 자발적인 원산지표시 참여를 유도하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또한 소비자들이 최종적인 감시자가 돼 농수축산물을 구입할 때 원산지 표시를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한급식신문 하상범 기자 fsn@fsnews.co.kr 2012.02.02

농가 시방역 구멍...39%만 수칙 준수

우리나라 일선 농장의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6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한달간 전국 가금류 농장 9천975곳의 방역수칙 준수실태를 조사한 결과 AI 관련 방역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곳은 39%에 불과했다.

구체적으로 출입통제 안내판을 설치한 곳은 35%, 출입통제시설을 갖춘 곳은 36%으로 조사됐다.

야생조류 차단막이 있는 농장은 41%로 다소 높았다. 규모가 300㎡ 이상 농가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발판 소독조의 경우 전체 농가의 43%가 운영하고 있었다.

농식품부는 일선 방역현장에서 방역대책이 미흡하다는 판단 아래 남방철새 도래 시기인 3~5월에 앞서 대대적인 방역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소독 차량을 동원해 철새도래지와 인근 논·밭을 주 1회 이상 소독하고, 무인 헬기를 통한 항공방제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또 검역검사본부와 방역본부 관계자로 구성된 중앙기동점검반 6개반을 편성해 가금류 사육농가,

도축장 등을 불시 점검해 규정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할 계획이다.

야생조류에 의한 유입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기 위해 모니터링 검사 대상 철새를 기존 2천마리에서 2천700마리로, 철새 분변은 2만5천개에서 2만7천개로 늘린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 관계자는 매주 1회 이상 농장 내외 소독, 매일 1회 이상 예찰 등 농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pseudojm@yna.co.kr 2012. 02. 06

오리도축 사상 첫 8천만수 넘었지만...업계 '외화내빈'에 울상

매년 평균 27% 신장률...8천557만5천수 기록 소비 뒷받침 안돼 재고 급증...가격하락 원인

지난해 오리도축 수수가 사상 처음으로 8천만수를 넘어섰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오리도축 수수는 총 8천557만5천수로 사상 처음으로 8천만수를 넘어섰다. 이는 전년 7천483만4천수보다 14.3%가 늘어난 것이며 5년 만에 2배가 늘어난 것이다.

더욱이 2005년 2천71만7천수에 비해서는 무려 4배가 넘게 늘어난 것이며 매년 평균 27%의 높은 신장률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오리업계는 늘어난 생산량만큼 소비가 뒷받침되지 않아 지난해부터 재고가 쌓이기 시작해 업체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다.

지난해 늘어난 1천만수 가량이 고스란히 재고로 쌓여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 같은 도축량은 지난해 HPAI로 인해 종오리가 대거 살처분 됐음에도 불구하고 늘어난 것은 무분별한 F1입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 인해 지난해 오리가격은 폭락하고 재고는 쌓이는 등 오리업계는 힘겨운 한해를 보내야만 했다.

월별 도축량을 살펴보면 HPAI의 영향을 받았던 3월까지 월 400만수대에 불과했던 도축량이 5월부터 폭발적으로 늘어나 5월 600만수, 6월 750만수, 7월 860만수를 기록했으며 9월에는 890만수로 월 도축량으로는 사상 최고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오리업계 관계자는 “최근 몇 년 동안 오리산업은 오리고기에 대한 선호도 증가로 인한 소비가 뒷받침 됐기 때문에 급격히 성장할 수 있었다”라며 “하지만 지난해의 경우 생산량 증가가 소비 증가에 비해 많았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하고 재고가 많이 쌓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했다.

축산신문 이희영 기자 lhyoung@chuksannews.co.kr 2012. 02. 08

전남대 전국 최초 오리농업 교육과정 개설

전남대 농업생명과학대학(학장 문승주)은 전국 최초로 오리전문 농업인 육성을 위한 2012년 최고 농업경영자 교육과정을 개설했다고 2월 9일 밝혔다.

이 과정은 오리산업의 발전을 위해 전라남도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데 전남지역 농민을 대상으로

첨단오리사육기술, 혁신적인 농장경영기법 등 오리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고소득 실현을 위한 체계적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수강생은 전남지역 거주자에 한해 서류 및 면접전형을 거쳐 총 30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전남도가 사업비 4000만원을 지원하고 수강생 부담금은 1인당 40만원이다.

전국 오리 생산량의 약 43%를 차지하고 있는 전남도는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오리전문 농업인 육성해 농가소득증대를 꾀할 방침이다.

문승주 학장은 “이 교육과정을 통해 전남대가 지역 특화산업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학·연·산 연계를 통해 오리산업 전문가를 육성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이석호기자 2012. 02. 09

한국오리협회장에 재선된 이창호 회장 “국내산 오리 인증제로 소비자 신뢰 높일 것”



“외국산 축산물 수입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오리산업 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2월8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열린 한국오리협회 회장 선거에서 무투표로 당

선되면서 연임에 성공한 이창호 회장. 이회장은 “최근 축산 선진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국내 오리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중책

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며 “이전보다 더 열심히 일하라는 의미로 알고 임기 동안 국내 오리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이회장은 오리산업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부터 국내산 오리고기 인증제를 도입하고, 시설현대화사업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생산이력제 개념의 오리고기 인증제사업을 협회가 주도적으로 추진해 소비자 신뢰를 한층 높여 나가겠다”며 “다른 축종에 비해 열악한 생산시설을 현대화하고 F1오리 입식 근절 활동 강화를 통한 고품질 오리고기 생산에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회장은 아울러 “국내 소비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일환으로 수출 확대를 위한 기반 구축에 노력하겠다”며 “올해 일본으로의 수출 재개를 추진하고 유럽을 비롯한 해외시장 조사에 나서는 등 수출을 본격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농민신문 양승선 기자 2012. 02. 10

농식품부, 올해 농식품 R&D 1522억 투자 작년보다 13.3% 증가..13일 자유응모과제 모집 공고

농림수산식품부가 올해 농식품 분야 연구개발(R&D) 사업에 총 1522억원을 투자한다. 농식품부는 2월 12일 올해 시설현대화, 수출확대, 가축질병 대응 등 농정현안 해결과 기후변화대응,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 신재생에너지 연구 등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민간분야 R&D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총 투자규모는 152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3.3% 증가했다. 특히 구제역, AI 등 국가재난형 가축질병에 대응하기 위한 '가축질병대응기술개발사업'과 종자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및 민간 종자산업 육성을 위한 '골든시드프로젝트'를 올해 신규 사업으로 추진한다. 또 R&D 지원사업과는 별개로 개발된 우수기술을 사업화하는 농식품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저리(3%) 장기(2년 거치 3년 균등 상환)의 정책자금인 '우수기술사업화자금(총 1000억원, 기업당 10억원 이내)'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오는 13일 자유응모과제 모집 공고를 내고 올해 R&D사업을 본격 시작한다. 지원 연구과제는 3월 민간 전문가 평가를 거쳐 오는 5월 최종 선정된다. 보다 자세한 관련 정보는 '농식품R&D통합정보시스템(FRIS)' 홈페이지(www.fr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2012.02.12

2월 저병원성 AI 발생 급증... '특별 주의'요구

2월 한파 등으로 조류인플루엔자(AI)가 집중 발생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관계기관 및 가금농장 등의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달 전국 야생조류의 AI(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이 3.5%를 기록, 지난해 12월 0.3%보다 10배 이상 증가했다고 2월 13일 밝혔다.

환경과학원이 지난달 전국 9개 조사지역의 야생조류 분변에서 채취한 시료 2천552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모두 89건의 저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바이러스 검출률이 높은 지역은 천안(6.0%), 보령(5.9%) 등의 순이었으며 전주에서는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

지난달 대설과 한파로 인한 먹이부족·스트레스 등이 AI 바이러스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게 환경과학원 측 설명이다.

환경과학원 관계자는 "한파가 이어질 경우 AI 발생 위험이 더 높아질 것"이라며 관계기관과 가금농장 등에 특별주의를 당부했다.

아이뉴스 24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2012.02.13

철새천국 천수만 시 원천차단 서산 4월말까지 무인헬기 동원 항공 방제 총력

서산시는 철새 도래지역인 천수만 A·B지구에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차단을 위해 무인헬기를 통한 항공방제를 오는 4월 말까지 매주 1회씩, 총 15차례에 걸쳐 추진한다.

매년 철새 도래하는 시기에 광역살포기 및 소독장



항공방제에 투입된 무인헬기 모습.

비를 동원하여 A·B지구와 인근 가금사육농가에 대하여 소독을 하고 있었으나, 철새도래지역이 넓게 분포하여 소독 및 차단방역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이번에 항공방제를 추진한다.

무인 항공방제는 1회 운영시간 15분에 방제면적이 1.5ha로 짧은 시간에 넓은 면적을 방제할 수 있고 소음이 적어 철새가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무인 항공방제에 대한 방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항공방제 전후 야생조류 분변을 수거해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 검사를 의뢰할 계획으로 방제효과가 높을 경우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서산시는 지난해 10월부터 AI·구제역 특별방역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고 가금사육농가에 대한 예찰 및 소독약품 지원과 철새도래지역 인근 농가와 방역취약지역 가금사육농가 10곳에 대하여 조류기피제를 지원해 야생조류에 의한 AI발생 방지를 사전 차단하고 있다.

충도일보 임봉순 기자 2012.02.13

군납 축산물 유통기한 1년으로 변경 이달 16일부터 적용... 품목별 소포장도 확대

올해부터 군납 축산물 유통기한이 180일(닭은 150일)에서 1년으로 바뀐다. 다만 유통기한은 1년이지만 군 납품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80일이다.

농협중앙회 축산유통부 군납팀은 군측과 협의를 통해 개정된 2012년도 축산물 구매요구서의 품목제조 변경 신고에 따르면 쇠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의 유통기한이 1년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군납박스 표시사항도 변경된다. 현행 유통기한 표시를 제조일로부터 180일로 되어 있는 것을 제조일로부터 1년으로 변경하고, 납품 기한을 별도로 제조일로부터 180일로 표기해야 한다.

포장중량도 변경된다. 육우, 수입쇠고기, **오리고기 및 삼계탕의 경우 2kg×1, 3kg×1, 5kg×2 등 변경된 포장규격으로 공급해야 하며,** 삼계탕 90%는 15kg, 10%는 마리당 날개포장으로 공급해야 한다.

축산물 구매요구서의 변경된 내용은 오는 16일부터 적용되며, 다만 박스 재고는 전량 소진 후 적용한다. 돼지고기, 닭고기 포장중량은 내년에 2kg×1, 3kg×1, 5kg×2 단위로 바뀐다. 삼계탕도 내년부터는 가공장과 사전 협의해 모두 마리당 날개포장으로 변경해야 한다.

한편 농협중앙회는 올해 축산물 군납단가 계약을 위해 품목별 생산비 자료 등을 방위사업청에 제출하고 한창 협상을 진행 중이다.

축산신문 신정훈 w313@hanmail.net 2012.02.13

올해 6개 도축장 폐업 추진 도축장구조조정협, 이사회서 사업계획안 논의

구조조정자금 총 42억 집행

도축장구조조정협의회는 올해 도축장 6개소를 폐업시킨다는 방침이다.

도축장구조조정추진협의회(이사장 김명규)는 지난 2월 9일 품평원 대회의실에서 이사회를 갖고

2012년도 사업계획안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는 6개소 도축장에 분담금 21억 원과 정부지원금 21억 원을 합친 총 42억 원의 구조조정자금을 집행하여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협의회는 경영난을 호소하는 한계기업이 폐업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해 나갈 예정이며, 경영개선이 어려워 자본잠식이 진행 중인 업체는 전문가나 관련자의 도움을 받도록 알선하고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제공할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워크아웃, 위탁경영, 전문경영인 영입 등 회생방안을 검토해 최종적으로 구조조정에 의한 정리를 권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구조조정 기회를 상실한 도축장, 즉 경매에 의해 도축장을 매입해 새로 사업을 하는 신규 참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설득작업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협의회는 특히 생산지 또는 소비지가 하나의 권역인 도축장은 서로 합병하도록 권유하고 가동률을 높여 이익을 창출시키고 미가동도축장은 구조조정 신청 및 정리를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한 이사는 “도축장이 경매에 의해 나오다보면 허가권이 소멸되지 않아 신규참여자가 발생하게 된다. 일종의 프리미엄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6개월간 구조조정자금 미납근거가 있다면 경매로 도축장이 문을 닫더라도 구조조정자금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tops4433@chuksannews.co.kr 2012.02.13

오리대국 중국과 FTA..걸음마 댄 국내 오리산업 '풍전등화' 한중 FTA 급물살...축산업계 미칠 영향은

생산량 전세계 74% 차지...사육수수 한국의 53배
국가가 직접 원종오리장 등 운영...사육기반 탄탄
FTA 체결시 국내 오리산업 피해액 637억원 분
석지역화 개념 도입 절대 불리...관세·SG 장치
필수

■ 중국의 오리 산업

중국의 오리 산업이 세계 오리 산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중국의 오리 산업은 상상
을 초월한다.

우선 오리고기 생산량은 16억8천200만수로 전
세계 오리 22억5천200만수의 74%를 차지하는
규모다.

사육마리수가 많다는 것은 그 만큼 중국인들이 오
리고기를 많이 먹는다는 의미다.

사육 기반도 우리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국가에서 직접 오리육종센터, 원종오리장 등을 운
영하고 있다.

또한 원종오리농장과 종오리농장만해도 전국적으
로 964개소에 달하며 429만수의 종오리를 보유
하고 있다.

오리 품종 역시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
육되고 있는 육용오리의 원산지답게 북경오리를
비롯해 천부오리, 번오리, 락오리, 백번오리, 여가
오리 등 다양하다.

중국의 오리 주산지로는 양자강 하류지역인 화동,
동남 연해성 및 하북성에 많이 분포돼 있으며 사

천성, 광동성, 호남성, 강소성 등 12개 성사에서
중국 전체 생산량의 83%인 15억3천200만수를
출하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오리 산업은 값싼 노동력과 사료자원
을 기반으로 가격 경쟁력도 높아 우리나라 가격의
절반도 안 되는 1천20~1천530원(kg당)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2003년 이후 훈제가공제품을
한국과 일본 등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연간 수출물
량은 2만5천톤 수준이다.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사육마리수는 53배 달하며
오리고기 생산량은 23배가 많고 사육농가수는 무
려 1천200배가 많다.

■ 한중FTA로 인한 피해 분석

중국은 우리나라가 미국 다음으로 많은 농산물을
수입하는 나라이다. 때문에 한중FTA는 한미FTA
나 한EUFTA에 비해 국내 농축산업에 훨씬 더 많
은 위협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중국의 동북지역의 경우 국내산 농축산물
과 동일한 품종과 품질의 농산물이 생산되고 있고
국내산과의 가격차 역시 적게는 1.5배에서 15배
까지 차이가 난다.

더욱이 중국의 오리 산업은 전 세계 오리 산업이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상상을 초월하기 때
문에 국내 오리 산업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
으로 보인다.

실제로 과거 중국산 오리고기가 수입되기도 했으
며 최근에도 훈제제품들이 수입되고 있다.

중국산 오리고기의 수입이 늘어나는 것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저급산 중국 오리고기 수입으로 인해
늘어나고 있는 오리고기 소비가 줄어들어 국내 오
리 산업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 오리업

계의 주장이다. 특히 중국과 FTA가 체결될 경우를 국내 오리 산업은 최소 136억에서 최대 637억 원이 감소될 것으로 분석됐다.

■ 한중FTA 협상시 오리업계의 대응방안

중국은 농업강국이지만 그동안 중국의 FTA를 맺은 국가들과의 협상에서는 농업을 보호하고 있으며 전체 농산물의 4.3%인 50개 품목을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뉴질랜드와의 FTA에서는 뉴질랜드 현행 수출액의 4%를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문제는 동식물 검역과 관련 위해성 분석제도와 동식물 질병 '지역화' 개념을 도입하겠다는 이행 약속을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지역화 개념이 도입될 경우 그 동안 수입 장벽이었던 검역 문제가 더 이상 수입을 막을 수 있는 명분을 잃어버릴 수 있다. 때문에 중국과 FTA체결시 반드시 지역화 개념 도입은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오리고기에 대해서는 FTA협상시 관세철폐 예외품목으로 지정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하지만 오리고기가 포함되더라도 반드시 동식물 검역 및 위생 등의 비관세 안전장치는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오리고기 수입 증가시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농산물 셰이프가드에 오리고기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밖에도 중국산 오리고기 수입으로 인해 소비자 가격이 하락할 경우 발생한 소비자 이득을 FTA로 피해를 입은 오리농가들에게 보상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축산신문 이희영기자 Lhyoung@chuksannews.co.kr 201. 02.15

나눔축산운동본부, 사단법인 설립 허가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2월 13일 사단법인 나눔축산운동본부 설립을 허가했다.

농식품부는 이날 민법 제32조 및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해 '나눔축산운동본부'를 사단법인으로 설립 허가했다고 밝혔다. 나눔축산운동본부 설립 목적은 지속가능하고 성숙한 선진 축산시스템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경제성장 뿐만 아니라 사회·환경문제 해결에도 적극 참여하는 축산인 모두의 실천운동으로서 농업인, 소비자 및 축산인의 행복한 미래를 구현하기 위함이다.

축산신문 김영란 ysfed@hanmail.net 2012. 02. 15

한·중 FTA체결시 오리산업 초토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시 오리산업의 생산감소액이 최대 637억3000만원에 달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오리협회의 발주로 김정주 건국대 교수가 연구한 '중국의 오리산업과 한·중 FTA영향분석'이라는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한국 농업생산액 41조6774억원 중 오리산업 생산액 1조3059억원이 차지하는 비중을 적용해 한·중 FTA체결시 오리산업 생산감소액을 산출한 결과 136억4000만원에서 최대 637억3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같은 결과는 한·중 FTA체결 후 1차년도에 오리 수입물량이 5% 증가한 후 이후 매년 2.5%씩 증가하고 국내 오리생산은 매년 5%씩 감소, 오리고기 수입시 현행관세가 10년 후 완전 철폐되며 오리가격은 매년 5%씩 하락한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했다.

반면 생산자의 손실과 달리 소비자의 이익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중 FTA체결 후 초기 5년간 소비자의 이익은 적게는 412억2500만원에서 많게는 590억83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는 한·중 FTA체결에 따른 오리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교수는 연구보고서에서 “세계 최대의 오리생산국인 중국과의 FTA가 체결·발효되면 성장단계의 국내 오리산업을 초토화시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며 “FTA로 GDP가 성장한다는 말로 농업인을 설득하고 저항을 잠재우려 들게 아니라 성장된 GDP가 농업인들에게 배분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과 이에 대한 홍보로 구성된 유통개선사업에 전체 예산의 43.5%인 3억7000만원을 배정하고 소비촉진사업에 2억4000만원(28.2%), 교육 및 정보제공사업에 1억7000만원(20%)이 배정됐다. 이처럼 올해 오리자조금사업이 유통개선에 포커스가 맞춰진 것은 FTA등 시장개방에 대응해 국내산 오리고기시장과 수입오리고기 시장을 완전 분리해 국내산 오리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김만섭 오리자조금관리위원(모란식품 회장)은 “육계의 경우 계육협회의 국내산 닭고기 인증제도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고 계열업체별 로고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닭고기 소비촉진에 한몫을 하고 있다”며 “오리자조금도 이처럼 국내산 오리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부각시켜 국내산 오리시장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자조금관리위원회에선 원활한 오리자조금거출방안과 의무자조금 도입방안 등이 함께 논의됐다.

농수축산신문 김동호 기자 kdh0529@afnews.co.kr 2012. 02. 20

농수축산 신문 김동호 기자 kdh0529@afnews.co.kr 2012.02.20

오리자조금, ‘유통개선’ 중점 추진

2012년도 오리자조금의 중점추진 사업은 유통개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오리자조금관리위원회는 지난 2월 17일 서울 서초구 제2축산회관 회의실에서 2012년도 제1차 회의(사진)를 개최하고 유통개선에 3억7000만원을 배정한 세부사업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2012년 오리자조금 사업계획을 보면 올해 오리자조금 예산은 8억5000만원으로 국내산 오리 인증

오리 인증사업 본격화 하반기부터 오리협회 인증위원 위촉, 5월 인증제 선포식 예정

올해부터 국내산 오리에 대한 인증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한·중 FTA 등에 대응해 국내 오리산업을 보호하고 자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한국오리협회는 지난 2월 17일 제1차 국내산 오리 인증위원회를 열고 인증위원 위촉과 인증사업

에 대한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

국내산 오리 인증사업 추진 논의는 지난해부터 협회 내부적으로 이뤄졌으며, 추진 배경에는 대내외적인 여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대외적으로는 정부가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한·중 FTA 협상에 앞서 국내 오리산업을 보호하고 자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수입육과의 차별성을 확보하겠다는 업계의 의지가 담겼다.

대내적으로는 지난해 AI(조류인플루엔자) 여파로 F1오리의 불법입식이 무분별하게 이뤄지면서 오리산업의 생산기반이 안정화되지 않은 가운데, 검정된 종오리에서 생산된 오리만을 인증함으로써 F1오리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안정적인 수급 조절을 도모하겠다는 계산이다.

협회는 사육단계를 포함한 전 단계에 걸쳐 시행하는 당초 계획안을 수정해 단계별 로드맵을 수립, 올해에는 도압장을 중심으로 가공·유통업체에 대해 인증사업을 시행하고 점차 요식업소 등에 확대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현재 운영하고 있는 명예감시원 및 유통감시단을 중심으로 현지 실사단이 구성, 오리고기 원산지 확인 및 인증 여부를 위한 심사 평가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협회는 이달 안으로 국내산 오리 인증사업에 대한 최종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오는 5월경 인증제 선포식을 가질 예정이다. 하반기부터는 신청업체들을 대상으로 현지실사를 실시, 인증작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협회는 “국내산 오리 인증사업을 통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중국 등 동남아산 저급 오리고기로부터 국내산 오리고기의 품질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증위원으로는 위원장에 이창호 협회 회장을 비롯한 협회 임원진들과 함께 외부 인사로 김응본 농식품부 소비안전정책과 과장, 이흥철 농식품부 축산경영과 서기관, 최희철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 가금과장, 정광모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김연화 한국소비생활연구원장, 김정주 건국대 교수 등이 위촉됐다.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2012.02.23

시 관리 위해 야생오리 인공위성 위치 추적한다

철새의 이동 및 정주 등을 기록한 위치 추적자료가 작성돼 조류인플루엔자(AI)의 효율적 관리에 쓰인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2월 24일 철새 위치추적자료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이달 초 전국 6개 지역 겨울철새 19마리에 대한 인공위성위치추적결과 야생오리의 평균활동범위는 27km, 주 활동범위는 5.4km라고 발표했다.

이는 아산, 안성, 완주 등 서부권과 고성 등 동부권, 창원 등 동남부권에서 청둥오리 16, 흰뺨검둥오리 2, 고방오리 1마리를 일 2회 위치추적해 얻어진 결과다.

또한 한 지역당 정착생활의 최대 일수는 62일이고 최소 일수는 1일, 평균 19.7일로 조사결과 나타났다.

호수·하천을 끼고 논이 넓은 서부권과 남부권의 겨울철새는 3.5~62km (평균 27km)안에 있으

며 대부분은 1~16km(평균 5.4km) 범위 안에서 생활하나 동부권의 철새는 남부권으로 이내 이동했다.

이들 철새는 호수·하천에서 쉬고 인접한 논에서 주로 먹이를 섭취했으며 서부권과 남부권은 호수·하천변에 논이 넓어 철새들이 조사가 시작된 이후 올해 2월초까지 정착생활을 하고 있어 2월초 까지도 철새의 먹이가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했다.

강원도에서 조사한 철새는 논과 먹이가 적어 늘러 살지 않고 남부권인 창원 주남저수지로 이동해 정주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관련자료를 농림수산식품부와 지자체 등 관련기관에 제공해 조류인플루엔자(AI) 관리에 활용토록 했고 향후 철새위치추적자료를 확충해 생태기반 AI관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위치추적조사 지역을 영암·해남, 파주, 낙동강하류, 파주, 울산, 순천 등으로 확대하고 큰기러기, 원앙, 고니, 가창오리로 조사종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어 위치추적 조사를 일 2회에서 일부는 일 4회로 확대해 지역별, 시기별 철새의 이동과 거동양상을 분석한 자료를 관계기관에 제공할 예정이다. 더불어 여름철새 4종에 대해 4개 지역에서 위치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조류인플루엔자 위험도 평가를 실시해 연중 질병생태에 기반한 AI관리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창권 기자 fiance@mtdtoday.co.kr 2012.02.24

한·미 FTA 3월15일 0시부터 발효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 긴급 브리핑 통해 공식 발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가 3월 15일 0시부터 발효된다. 지난 2006년 6월 협상 개시 이후 5년 9개월여 만이다.

박태호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21일 오후 긴급 브리핑을 갖고 한·미 양국이 이날 미국 시애틀에서 가진 대면 협의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진행해 온 한·미 FTA 이행 준비상황 점검 회의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또 한·미 FTA 발효 일자를 3월 15일로 합의했다는 외교공한을 주한 미국대사관 실무자가 외교통상부를 방문해 교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발효 일자는 한·미 양국의 관련 산업계와 기업 등이 FTA를 활용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박 본부장은 지난해 11월 한·미 FTA 국회 비준 이후 이행 준비 점검회의에 시간이 지연된데 대해 FTA 협정문과 양국의 법률, 규정 등이 방대해 기술적으로 확인을 해야 할 부분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이행 준비 점검회의에 대해 “FTA 협정 내용을 수정하거나 재해석하는 새로운 협상이 아니었다”고 못 박고 “협정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법적, 행정적, 제도적 조치사항들을 상호 확인하기 위한 협의였다”고 부연했다.

FTA 발효 효과에 대해서는 “최근 유럽의 재정 위기로 우리의 대유럽 수출이 타격을 받고 있다”면서 “세계 최대 선진국 시장인 대미 수출이 섬유와 의류, 철강, 기계류, 석유·화학제품, 전기·전자제품, 자동차, 자동차부품 등을 중심으로 늘어나

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본부장은 한·미 FTA 발효 후 일정과 관련 “우리 기업들이 FTA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며 특히 중소기업들이 FTA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합동 FTA 종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가 결의한 FTA 재협상 촉구에 대해서는 “투자자 국가 소송제도(ISD)에 대해서는 발효된 이후 90일 이내 서비스투자위원회를 개최 미국 측과 협상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축산경제신문 이준영 기자 2012년 2월 23일

서울동물원, 세계 첫 ‘구제역·AI 방역 백서’ 발간



서울동물원은 세계 첫 야생동물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백서 ‘보이지 않는 적,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를 막아라’를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백서에는 2010년 11월 29부터 이듬해 5월 20일

까지 164일동안 서울동물원이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해 동물원 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기록을 담은 현장 조치사항 매뉴얼이 담겼다.

현재 서울동물원이 보유하고 있는 구제역 감수성

동물은 기린, 하마, 코끼리 등 대형 동물 등 12개 동물사 55종 569마리에 이르며 조인플루엔자 대상 동물은 5개 동물사 107종 954마리다.

이원호 서울대공원장은 “외국동물원에서도 이들 질병이 발생한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방역을 위한 참고 매뉴얼이 없고 국내 정부의 지침 또한 가족위주로 야생동물에 적용할 자료를 찾기가 어려워 이번에 백서를 발간하게 됐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박태정 기자 2012년 2월 26일

한중 FTA “설명도 대책도 없다” 강경 투쟁 선포

외통부, 한중 FTA 공청회 강행...농업계 거세게 반발
농축수산인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외교통상부가 한중FTA(자유무역협정) 공청회를 강행했다.

농수축산연합회, 농민연대 등 농수축산 단체들은 지난 2월 24일 외교통상부가 코엑스컨벤션센터 3층 E홀에서 개최한 ‘한중FTA 공청회’ 개시 30분 전, 회장 밖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중FTA 추진을 결사 저지할 것을 밝혔다.

이어 ‘한중FTA는 우리 농수산업을 죽이고, 중국 농수산물 수입을 늘려주는 조공에 불과하다’는 내용을 담은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이윤수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은 이날 “외교통상부의 한중FTA 공청회는 MB정부 임기

내에 실무협상을 개시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우리 농업과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한중FTA를 강행한다면 단언컨대 400만 농어민들은 정부를 상대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기자회견 후 김준봉 농수축산연합회장을 필두로 농민단체들은 한중FTA공청회 저지를 위해 공청회장에 진입, ‘우리 농민과 국민 죽이는 한중FTA 중단’과 ‘이명박 정부 퇴진’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공청회가 잠시 중단되는 등 소요가 있었으며 공청회 철회를 주장하는 농민들은 단상을 점거하고 결사적으로 진행을 저지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농민단체장과 농민들은 공청회장 밖으로 끌려 나가기도 했다.

박점옥 전국여성농민총연합회장은 “정부는 소가 죽어가는 것은 보여도, 농민이 죽어가는 것은 못 본다”고 외치며 공청회 중단을 부르짖었다.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은 “농민단체는 한중FTA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듣지 못했고, FTA에 따른 농가 피해대책이나 대안도 강구되지 않은 상태”라며 “정부에 대한 신뢰를 쌓은 연후에야 공청회를 거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이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부회장도 “대책이 현실보다 나아질 순 없다”며 “미국 경제 속국도 부족해 중국 농업 속국이 되면 되겠냐”고 질타했다.

농민단체의 단상 점거가 이어지는 동안 최석영 외

통부 자유무역협정교섭대표와 김영무 외통부 자유무역협정정책책임관은 경찰 호위를 받으며 각각 개회사와 한중FTA 추진경과 보고를 황급히 읽고 공식적인 공청회 개시를 선언했다.

이어진 공청회에서 어명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농업분야 주제발표를 통해 “중국과의 FTA가 국가 전체 차원에서 불가피하다지만 경쟁력, 가격, 관세, 거리 등으로 농업분야에 엄청난 피해가 예상된다”며 “양허기간, 양허품목, 세이프가드, 검역 강화 등을 통해 제한적이고 낮은 수준에서의 FTA를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재모 협성대학교 교수도 “시기에 제한을 두고 서둘러 접근하기 보다는 동북아 경제 협력, 통합 등과 함께 양국 간 인식 차가 해소된 연후에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며 “인류의 보편가치 조차 제대로 추구하고 있지 않는 중국과의 FTA는 서두를 이유가 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농민단체들의 주장에 대해 최석영 외통부 자유무역협정교섭대표는 “농업계의 피해와 대책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와 충분한 설명과 협의가 있었을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농수축산 신문 이한태 기자 lht0203@afnews.co.kr 2012년 2월 27일

